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 병 삼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라 관계로 이뤄진 존재다.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 즉 '사람 사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제 한 몸 견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때라야 참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이지!”라는 우리 속담도 같은 의미다. 여기 '사람 짓'이란 곧 상대방과의 사이를 제대로 수행할 작어야, 즉 소통할 수 있을 때라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덕담으로 자주 쓰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 속에도 그런 뜻이 담겨있다.

이 점에 주목할 것이 유교의 효도이다. 효도는 5가지 인간 관계망, 즉 네트워크를 뜻한다. 부자간, 부부간, 벗들 간의 사이를 잘 이룰 때라야, 사람다운을 획득한다. 오륜의 핵심은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외려 상대방을 중시하는 데 있다. 노랫말을 빌리자면,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대방의 처지로 바뀌 생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사실이다. 옛날 공부란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몸에 익히는 과정을 일컬었다. 명륜당이라, '오륜을 닦아 밝히는 집'이 대학(성균관)의 본부건물이었던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이란 컴퓨터 통신망이다. 관계를 맺어 서로 연결하고, 또 소통한다는 점

에서 인터넷의 핵심도 '사이'에 있다. 인간의 간(間)과 인터넷의 인터(inter)는 그 뜻이 똑같은 것이다. 인터넷의 특징은 정보교류가 상호적이고, 수평적이라는 점에 있다. 인터넷은 위에서 하달하는 명령보다는 평등하게 교류하는 정보가 주를 이룬다.

'사람의 사이'가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사람다운을 이뤄낸다면, '정보의 사이' 곧 인터넷 세상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의 자발성으로 구성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사람이든, 인터넷

이든, '사이'는 도덕성을 본질적으로 내장한 듯하다.

이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정치란 청와대나 정부청사, 혹은 국회의사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만이 아니다. 도리어 비근하고 구체적인 일상 상 즉 가족 간, 동료 간의 사람-사이를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기능은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 즉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공자가 정자정야(政者正也)라, '정치란

‘사이’에 대한 명상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사이'가 힘과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 망가지고 왜곡되는 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언론기관과 정치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문제는 심화된다. 정치는 본래부터 정치가의 전용물이 아니며, 소통은 언론기관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는 전문가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삼이사의 평범하고 서투른 사람들이 행하는 유일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최종권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안철수 원

장의 1500억 원 기부를 정치적 행보로 규정하며 "과확자는 과학을 해아 한다.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고 힐난한 것은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이 지점에 오늘날 '나는 폼수다'로 상징되는 사적 미디어의 흥기와 '안철수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사람의 사이와 정보의 사이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굉 잡는 게 매'라고 했듯, 사람과 정보의 사이를 제대로 소통하는 자가 정치가 될 때이다. 아니 평범한 시민인 내가 잘못된 정책을 분노하고 '졸지 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정치다. 시민도 이 생각을 응원하는 듯하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며/ 이 세상이 나뉘어질 뻔 할 때지만 // 시와 경제의 사이 / 정치와 경제의 사이 (…)/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 억압과 통쾌한 남을 뿐이다.” (김광규, '생각의 사이')

〈영신대 교수·정치사상〉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이요한

#1.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성실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항상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최근엔 보직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과 동료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언젠가부터 자신의 생각을 다 아는 듯한 남자 목소리(환청)가 들렸고, 환청에 신경을 쓰다 보니 직장에서 실수로 잦았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예상치 못했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강한 의지로 회사생

정신분열병, 약만 잘 챙기면 일상 가능

활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끝에 1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2. 20대 여성 김씨는 취직시험에 떨어진 후 심각한 불안과 외로움을 겪었다. 주변사람들이 일부러 자신에게 가대침을 보는 것 같고, 자신에 대해 수군대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했다. 점점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뒷 층에서 일부러 큰 공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집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이를 심각히 여긴 가족들은 김씨와 함께 내원했고 정신분열병 치료를 시작했다. 수년간의 성실한 복약과 가족의 보살핌으로 그는 일자리를 얻어 새 삶을 살고 있다. 필자가 정신분열병 진단을 내렸던 두 환자를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 경험한 증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과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신분열병은 인구 1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며, 발병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두 환자들도 필자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고 하마터면 치료시기를 놓칠 뻔했다.

정신분열병은 고혈압과 같이 평소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스스로 약을 빠집없이 챙겨 복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약물 치료 후 증상이 거의 호전됐다고 해도 복용을 중단할 경우 1년 이내에 70% 이상 재발한다. 이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에 더 많은 공을 들

여야 한다.

증상이 좋아져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유지기 치료중인 환자들은 '주변에서 정신분열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이냐'는 말을 하곤 한다.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환자의 정신분열병 치료 노력을 방해해 알게 모르게 재발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날마다 복용할 필요없이 한 달에 한번 주사만으로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치료제가 나와 보다 적극적인 치료 가능해졌다. 환자들은 예전보다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하게 됐고, 치료 비용과 약물 복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 전망이다. 재발 위험성이 낮아지는 대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의지와 성실한 약물 치료를 하면 '뇌와 마음의 병'인 정신분열병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 대신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의 '조현병'으로 병명 개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보다 떳떳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뒷받침될 날 바란다.

〈천주의 성요한병원 정신과장〉

기고



문상필

답답하다! 불안하다!
북부소방서 안전관리계 점검반과 함께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떠오르는 단다.

매달 해야 하는 소화기의 자체점검이 안 되고 있거나 점검표 자체가 없었고, 비상구 표시등이 고장이 나있고, 투척소화기의 거치대만 있고 소화기가 없는 경우, 녹슬고 부서지고 압이 떨어져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들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평굴고 있었고, 주방의 구조변경으로 조리대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확산소화기의 위치는 그대로인 경우, 소화기가 있어야 할 곳에 정수기가 놓여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안전 사각지대

있고 소화기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 놓여 있는 등 관리와 점검이 부실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너무도 많았다. 특히 복지관 내에 위치한 경로당이 아닌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은 주방에 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에는 연면적 33㎡이상 소화기구, 300㎡이상 600㎡이하에는 간이스프링클러, 4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5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600㎡이상 스프링클러, 1500㎡이상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소방시설 기준대로라면 경로당과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극히 소규모여서 소방시설 기준 상 소화기에 비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로당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들은 화재발생시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유가 무엇

일까?

작년 이맘때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건이 불현듯 떠올랐다. 수용자 대부분이 치매와 중풍 등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어서 피해가 더 컸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화재정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단 인정되었다.

충남 임마누엘복음복지관과 금매복지원 화재, 김해 행복한 마을 화재, 광주 새희망복지선교원 화재 등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들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및 생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갖춰달라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제정을 통해 2012년 2월 5일부터는 24시간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화

재발생 자력으로 피난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현 소방시설만으로는 화재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가 필수적이다.

최근 광주시는 안전도시계획을 조직하고 모든 재래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 추위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지금,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재래인 화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다.

24시간 생활시설만이 아닌 화재사고시 대처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의제적인 것이 아닌 전면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실태 조사를 하고 이용자와 생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동등소 소방시설이 아닌 화재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하지만, 존댓말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인간보다 사물이 더 대접받고 사물과 같이 취급당하는 물질 만능이 팽배한 듯 해 여간 마음이 불편하다.
가끔 물건을 살 때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대답으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앞으로 백화점에서부터 고객의 응대법을 제대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영란·광주시 동구 동명동

시설

한미FTA ‘뺨질식’ 농업대책 안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농촌에 위기가 닥쳤다. 한미FTA로 농·축산 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 대책은 지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전남 전남연맹 등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한나라당 앞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전남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연평균 930억 원에 이르고, 발표 15년이 되면 소득 감소 규모가 1조408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는 연 생산 감소액이 700억 원(15년간 피해액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과수(143억), 채소·특용작물(73억), 곡물(23억) 등도 그 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전남도가 건의

한 'FTA 피해 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등 59개 과제 중 고작 8개만 반영했다.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사업(720억 원),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금 조성 사업(1억 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누락됐다. 박준영 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어업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정부 대책이 그만큼 무미건조한 식이인 데 있다.

정부는 농업 대책으로 22조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쓰임새가 뺨질식에 불과하다. 차제에 정부는 나눠주기식 정책에서 탈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농촌에 닥쳐올 개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서둘러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적이 대부분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시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환경시설공단 등 4곳이 '가~마' 등급 중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영업수지비율과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각각 21.09%와 315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1인당 영업수익이 전년에 비해 각각 20.32%, 40.05% 감소했다.

1인당 당기순이익도 광주도시공사는 전년에 비해 81.69% 줄었고, 전남개발공사는 무려 447.19%가 감소하면서 전년도 흑자(1299만 원)에서 적자(4511만 원)로 돌아섰다. 또 광주환경시설공단은 운영실적에서 전국 5개 환경시설공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부실한 데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이 주된 요인이다.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공기업 직원 1인당 연봉이 전국 평균보다 많고, 기관장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여대에 달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

실제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원 566명 가운데 9급 정원이 45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8급으로 승진해 9급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만성적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할 공사가 자기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인 것이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공기업이 재정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빠지면 주민의 혈세로 상당액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 공공기업 경영 내실화와 흑자 경영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無 等 鼓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서민가계는 파란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먹는데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최근 우유, 라면, 음료, 맥주 등 식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

은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먹고 살만 해야 못도 사고 책도 산다'는 말이 있듯이 빠른 살림에 문화생활 비용은 점점 줄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엔겔계수'다. '엔겔계수'란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료품 관련 지출보다 식료품 이외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

22.8%로 3분기(24.4%)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단이 나 패스트푸드 등에 쓴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엔겔계수는 무려 33%까지 올라간다. 지출의 3분의 1을 먹는데 쓴 셈이다.

이밖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출은 2.1% 증가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물가가 올라서

먹을거리를 사는 데 쓴 돈은 늘었지만, 실제 먹는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엔겔계수가 높아진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정부는 곧 식료품 가격이 꺾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언제나 서민들이나 소득 하위계층이고 보면 최근 화두로 등장한 '복지'가 아직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기 전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재호 경제부처장 lion@kwangju.co.kr

잘못된 존댓말 남발하는 고객 응대법 개선해야

“고객님! 여기 부탁하신 옷 나오셨습니다.”
“고객님! 금액은 10만원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다. 이말은 어디에 존댓말이 붙는 것인지 웃이 나오시고, 돈이 나오시고 몇 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적을 하면 무시하듯 웃고 말아버린다. 유행처럼 백화점, 가게, 식당 어디서나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제대로 고객을 모시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세탁소에 가면 세탁 맡긴 옷이 나오셨

고, 가게 가면 물건값이 얼마 나오셨고...” 최근 TV에서 흡소풍을 보는데 냄비를 보고 “이 예는 얼마고 저 예 얼마이고, 이 친구는 얼마고, 저 친구는 얼마다”라는 식의 표현이 참신하고 시청자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문자를 보낼 때도 맞춤법을 맞게 사용하면 구식한 것 같고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같아 일부러 소리 나는 대로 관하게 쓰는 것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론 습관으로 굳어질까 걱정이스럽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선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